

# 동북아역사 리포트



Vol. 42

NORTHEAST ASIAN HISTORY REPORT

2023년 6월 15일

## 독일과 폴란드의 역사 화해를 위한 공동 교과서 프로젝트

한운석\_튀빙겐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펠로우

상충하는 역사적 기억들

독일-폴란드 교과서 협력과 공동 권고안

공동 역사교과서 프로젝트

맺음말

# 독일과 폴란드의 역사 화해를 위한 공동 교과서 프로젝트

한운석\_튀빙겐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펠로우

교과서를 통해 민족 간 증오가 전쟁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으려는 노력은 유럽에서 먼저 시도됐다.<sup>1</sup> 국가 간 제국주의적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급진적 민족주의(국수주의)가 비등해 촉발된 제1차 세계대전의 참화를 겪은 후, 평화주의자 사이에서 각성이 일어난 것이다. 1922년 설립된 국제연맹 지적 협력위원회는 카자레스 결의안에서 교과서 개선을 통해 유럽 평화에 기여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정식으로 출범한 국제연합 산하 유네스코는 이러한 취지를 계승하여 “전쟁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평화를 건설해야 할 곳도 인간의 마음속이다. 사람들은 다른 나라의 풍습과 생활에 대한 무지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의심하고 불신했으며, 여기서 초래된 갈등이 종종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선언하고, 교과서 개선 활동을 주요 업무 중 하나로 삼았다. 유네스코를 통한 협력의 대표적인 예가 독일과 프랑스의 교과서 대화로, 이는 유럽 여타 국가 사이의 역사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의 모델이 되었다.

19세기 후반 이후 열강의 각축장으로 전쟁과 식민지배를 경험한 동북아에서도 유럽의 역사교과서 협력은 관심 대상이었다. 한중일 간 역사교과서 개선을 위한 모델로 특히 주목받은 것은 독일과 폴란드의 교과서 협력이었다. 앞서 언급한 독일과 프랑스는 대등한 국력과 영향력을 가진 라이벌로, 전후 영토 분쟁도 미미했고 새로운 유럽 질서를 함께 이끌어 갈 파트너로 쉽게 역사적 화해를 모색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독일과 폴란드의 경우는 달랐다. 폴란드는 1772년 1차 분할 점령 이후 1918년까지 150년 가까이 독일, 러시아, 오스트리아의 식민지배를 받았고, 1939년부터는 히틀러의 나치독일에 더욱 혹독한 수탈과 희생을 당했다. 전후 냉전 시대에 양국은 서로 적대적인 진영에 속했으므로, 역사교과서 대화에서 훨씬

1 이 글은 집필자가 이미 발표한 논문들과 2020년 출간된 독일-폴란드 공동 역사교과서 제4권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독일과 폴란드 간의 성공적인 역사교과서 대화를 간략하게 집필자 개인 관점에서 소개한 글이다.

어려운 장애물과 씨름해야 했다. 따라서 한일 간 역사 갈등 극복을 위해 한일 양국의 역사가와 역사 교육 전문가들이 지난 수십 년간 독일-폴란드 교과서 대화에 관심을 가진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이 글에서는 독일과 폴란드 사이에 역사적 기억을 둘러싼 갈등이 어떠한지, 역사교과서 개선을 통한 화해를 위해 어떤 노력이 전개되었는지, 그 결실로 최근 독일-폴란드 중학교용 공동 역사교과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상충하는 역사적 기억들

1772년 프로이센은 러시아 및 합스부르크 제국과 결탁하여 폴란드를 분할 점령함으로써 유럽의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다. 그 후 프로이센은 여러 차례에 걸쳐 폴란드 재분할에 적극 참여하였고,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할 때까지 포즈난 등 구 폴란드 왕국의 서남부 지역을 식민지로 지배했다.

독일인에 대한 폴란드인의 민족적 적대감을 결정적으로 심화시킨 것은 1939년 나치의 폴란드 침략 및 점령정책에서 비롯된 전쟁 경험이었다. 나치 정권은 폴란드인을 게르만족의 노예로 만드는 유럽 질서를 계획하였고, 그것에 방해가 되는 폴란드 지도층 전부를 제거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나치는 전쟁 목표를 잔인하게 실천하였다. 폴란드 인구는 1939년 약 3,500만 명에서 1946년 약 2,200만 명으로 감소했고, 엘리트층 다수가 암살되거나 전사했으며, 망명지에서 돌아오지 못했다. 전쟁이 벌어진 6년 동안 그리고 나치 점령기에 학자 30%, 변호사 57%, 판검사 22%, 의사 39%가 죽었으며, 전체적으로 대졸자의 3분의 1이 희생되었다. 나치의 폭압적 지배에 희생된 이들에 대한 보상은 양 국민의 화해를 위해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였다.

더욱 어려운 과제는 영토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폴란드 영토는 약 38.9만 제곱킬로미터에서 약 31.2만 제곱킬로미터로 축소되었는데, 전쟁이 끝나고 전후 질서를 위한 연합국 회담을 통해 오데르-나이세선을 중심으로 1937년 기준 47만 제곱킬로미터였던 독일 제국 영토에서 약 10.2만 제곱킬로미터(남한 면적은 9.8만 제곱킬로미터)가 폴란드에 귀속되었다. 폴란드는 동부 지역을 소련에 할양하는 대신 독일의 동부 지역을 얻은 것인데, 이는 새 폴란드 영토의 1/3에 달하였다. 폴란



전후 오데르-나이세선으로 독일이 상실한 영토



전후 오데르-나이세 국경 획정이 독일-폴란드 관계를 개선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이라는 것을 풍자하는 만평



3등 분할? 결코 안 돼!(전후 동서독 분단과 독일 동부 지역 상실을 반대하는 서독의 포스터. 오른쪽 흰 선이 현재 독일-폴란드 국경인데, 그 북쪽에서는 오데르강, 남쪽에서는 지류인 나이세강이 국경을 형성하고 있다.)

드 영토는 수백 킬로미터 서쪽으로 이전되었다. 이러한 대규모 영토 변경으로 약 800만에 이르는 독일인이 강제 이주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많은 희생이 수반되었다.

전후 서독인은 전쟁 중 자신들이 자행한 범죄 행위보다 동부 독일 지역에서 추방당했을 당시 독일인이 겪은 고통에 시선을 집중했고, 소련, 폴란드, 체코 등 추방자 국가와 포츠담 결정에 책임이 있는 연합군의 희생자로 자신들을 부각시켰다. 1949년 9월 20일 정부 선언에서 아데나워 정부는 나치당원에 대한 사면과 전후 서독 사회로의 통합, 피추방자의 통합 및 1937년 독일 국경에 대한 권리 요구 견지를 역사 정책의 중심 방향으로 제시했다. 전후 서로 다른 진영으로의 편입과 체제 대립은 역사 해석에서의 차이를 더욱 확대했다.

역사적 화해를 위한 진지한 시도는 1960년대에 개신교와 가톨릭교회에서 시작됐다. 개신교 평신도 8명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범죄를 고백하고, 오데르-나이세 국경을 인정할 것을 분명히 요구했다. 이들의 '튀빙겐 각서'(1962. 2)는 폴란드와의 화해를 요구하는 담론 형성에 중요한 자극을 제공했다. 1965년 10월에는 독일 개신교 평의회가 같은 취지의 각서를 발표했다. 이에 대한 화답으로 한 달 뒤 '폴란드 주교들이 독일 기독교 형제들에게 보내는 서한'에서는 1천 년 동안의 독일-폴란드 관계사에서 긍정적인 측면들을 부각하고, 나치 시대 독일인 희생자와 전후 독일인 난민, 폴란드로부터 고향을 잃고 추방된 독일인의 고통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우리는 용서하며 또한 용서를 구한다'라는 이 서한의 정신은 이후 독일-폴란드 교과서 대화의 밑거름이 되었다.

1969년에 폴란드 공산당 서기장 고무우카(Władysław Gomułka)가 서독 정부에 협상을 요청했고, 서독 정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의 유대인 봉기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위령탑 앞에 무릎 꿇은 서독 빌리 브란트 총리

부는 빌리 브란트가 ‘접근을 통한 변화’라는 모토하에 신동방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1970년 12월 7일 바르샤바 조약이 체결되었다. 독일과 폴란드 사이에 맺어진 이 조약은 오데르-나이세 국경의 불가침성을 확고히 해 독일의 수정주의, 곧 독일-폴란드 국경을 바꾸고자 하는 의도에 대한 두려움을 상당히 경감시켰다. 1970년대부터 형성된 폴란드의 반체제 세력들은 양국 간 역사 갈등 문제에 전향적인 인식을 지녔다. 폴란드 반체제 인사들은 서독인이 나치와의 관계를 청산하고 보상을 수행했고 서유럽적 가치를 수용했으므로 그들을 용서해야 하며, 강제 이주와 관련하여 독일 주민이 겪은 고통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 독일-폴란드 교과서 협력과 공동 권고안

1948년부터 독일-프랑스 교과서 대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했던 독일 유네스코 위원장인 게오르크 에커트 교수(Georg Eckert)는 폴란드 측 파트너인 블라디슬라우 마르케비치와 함께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1972년 2월 바르샤바에서 제1차 독일-폴란드 교과서협의회를 진행했다. 역사가, 지리학자, 교육학자, 교과서 전문가, 교과서 출판업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회의는 개방적이고 학문적으로 진지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졌다. 양측 모두 실용적인 태도를 보였고, 이데올로기적 대립은 없었

다. 매년 두 차례의 협의회를 개최하여 총 26개 주제에 대한 권고안이 합의되었다. 대부분 타협에 이르렀지만, 일부 합의를 보지 못해 상이한 해석들을 병렬적으로 열거한 것도 있다. 수백 년 동안 프로이센/독일 제국 영토로 있다가 전후 국경 조정으로 폴란드에 편입된 슐레지엔과 포메른에 대한 두 번째 권고안이 그러한 예이다. 1976년 4월에 처음으로 26개 항목의 전체 권고안이 발표되었다. 1977년 초에는 양국어로 된 『서독과 폴란드의 역사 및 지리교과서를 위한 권고안』 초판이 발행됐는데, 이는 서독에서 1990년대 초까지 약 30만 부나 발간되었다. 권고안은 1980년대까지 서독과 폴란드에서 기존 교과서를 개정하거나 새 교과서를 만드는 데 점차 반영되어 ‘교과서 수정을 통한 양국 간 이해 증진’이라는 독일-폴란드 교과서협회의 본래 목적을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권고안이 완성된 후에도 협의회는 1년에 한 차례씩 독일과 폴란드의 도시에서 교과서회의를 번갈아가며 열었다. 여기서 권고안에서 너무 간략하게 다루거나 합의를 보지 못한 주제를 차례차례 학문적으로 상세히 검토했다. 또 회의는 해당 주제에 대한 권고안의 테제들이 양국 교과서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도 점검했다. 교과서회의의 성과는 1980년대 말까지 양국에서 10권의 책으로 출간됐고, 양국 관계사 연구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1980년대까지의 이러한 학문적 연구 성과와 양국 역사가 사이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독일-폴란드 교과서협의회는 수업 현장에서 실천하는 데 구체적인 도움이 될 교사안내서를 만드는 데 집중하였다. 그 성과가 2001년에 발행된 『20세기 독일-폴란드 관계사에 대한 교사안내서』이다.

이러한 경험들과 교과서 대화에서 장기간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신뢰를 구축한 것이 결국 양국의 공동 역사교과서 프로젝트도 가능하게 했다.



게오르크 에커트 연구소에서 있었던 독일-폴란드 교과서협의회



브라운슈바이크 소재 게오르크 에커트 국제교과서연구소-라이프 니츠 연구소

## 공동 역사교과서 프로젝트

2007년 12월 독일과 폴란드의 외무장관들은 수십 년간 양국 역사가, 지리학자, 역사교육 전문가들의 대화와 협력의 장이었던 독일-폴란드 공동 교과서위원회 경험을 바탕으로 공동 역사교과서 프로젝트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2008년 초 양국 정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무 기구를 만들 것을 합의했다. 독일에서는 외무부와 각 연방주 문화부들이 브란덴부르크주 교육·청소년·스포츠부의 지도하에 정치적 조정과 후원을 책임졌다. 폴란드에서는 민족교육부, 외무부와 문화및민족유산부가 책임을 맡았다. 이 프로젝트는 또한 독일-폴란드 협력을 위한 재단을 통해 실질적인 후원을 받았다.

독일-폴란드 공동 교과서위원회의 두 의장은 학술 전문가를 위촉하였다. 이에 브라운슈바이크의 국제교과서연구를 위한 게오르크 에커트 연구소-라이프니츠 연구소와 폴란드 과학아카데미 베를린 역사 연구센터가 사업을 학문적으로 조율하는 과제를 맡았다. 프로젝트 실무 수행을 위해 조정협의회와 전문가위원회도 구성했는데, 후자가 2010년 공동 교과서를 위한 기본 콘셉트에 대한 제안서를 작성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양국 역사가들과 교육학자들로 구성된 교과서 집필진이 2016년에 제1권(Von der Ur- und Frühgeschichte bis zum Mittelalter, 초기 역사부터 중세까지), 2017년 제2권(Neuzeit bis 1815, 근세 초부터 1815년까지), 2019년 제3권(Vom Wiener Kongress bis zum Ersten Weltkrieg, 빈 회의부터 제1차 세계대전까지), 2020년 제4권(20. Jahrhundert bis zur Gegenwart, 20세기부터 현재까지)을 출간했다.

독일-프랑스 공동 교과서가 양국 중심 유럽사를 서술하였다면, 독일-폴란드 공동 교과서는 서유럽 편향성을 극복하고자 노력했다. 독일의 기존 역사교과서에서 무시했거나 소홀히 다루었던 인접 국가 폴란드 및 동유럽 국가 역사를 보다 비중 있게 다룬 것이다. 공동 교과서에서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양국 사



양국 교과서 집필진이 함께 출간한 공동 역사교과서

이에 오랫동안 쟁점이 되었던 문제들이다. 즉 국경을 둘러싼 갈등과 영토 변경을 두고 중립적 시각에서 비교적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상부 슐레지엔 지방은 석탄과 철이 풍부하게 생산되고 근대 중공업이 발전한 지역으로, 양국 모두 소유권을 강하게 요구하는 곳이다. 따라서 그 영유권을 둘러싼 갈등이 컸다. 공동 교과서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의 패전 및 폴란드 독립과 함께 일어난 영토 분쟁, 연합국 개입하에 이 지역이 양국에 분할된 과정을 1쪽에 걸쳐 서술하고 있다(19쪽). ‘중동부 유럽의 분할’이라는 항목은 1939년 8월 23일 독일 외상 리벤토르프(Joachim von Ribbentrop)와 소련 외상 몰로토프(Wjatscheslaw Molotow) 사이의 불가침조약을 비밀 추가의정서 사료와 함께 설명하고 있다. 히틀러와 스탈린은 여기서 중동부 유럽을 양국 영향권으로 분할하는 약속을 했다. 스탈린은 심지어 전쟁 수행에 긴요한 원유를 독일 제국에 제공하기로 약속함으로써 히틀러가 마음 놓고 폴란드를 침공할 수 있게 했다. 공동 교과서는 이렇게 곳곳에서 제2차 세계대전 발발과 전쟁 범죄에서 스탈린의 공동 책임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다.

교과서는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나치독일의 전쟁 범죄를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동유럽에서 독일의 점령정책’이라는 글은 전시 독일의 점령정책이 인종주의적으로 각인되었다는 것을 폭로하고 있다.

중동부 유럽에서 원주민에 대한 점령군의 정책은 인종주의, 테러, 강제 노동, 추방, 강제 이주 그리고 살인 행위로 각인되었다. 저항 혐의가 추정되거나 실제의 저항은 서유럽에서보다 훨씬 더 잔인하게 진압되었다. ... 폴란드 점령지에서만 800개 이상의 촌락이 (보복 행위로, 필자) 파괴되었고, 독일군이 점령한 소련 지역에서는 파괴 정도가 더욱 심각했다. 촌락들이 파괴되었고 그 주민들은 살해되거나 집단 수용소로 이송되었다.

또한 교과서는 독일 점령군이 전쟁 초기부터 폴란드 문화와 문화재를 파괴하고, 엘리트들을 조직적으로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는 것도 밝히고 있다.

공동 교과서는 전쟁 중 유럽에서의 저항운동을 다루면서, 한 면에는 1943년 5월 바르샤바 게토에서 일어난 유대인의 절망적인 봉기를 서술하고, 그 오른쪽 지면에는 1944년 8월 폴란드 향군의 봉기를 다룬다. 이 사건은 독일에서 흔히 유대인 게토의 봉기와 혼동되었는데, 폴란드 학자들은 교과서 대화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다. 폴란드 향군의 봉기에 독일군은 강력한 화력으로 잔인하게 반격했지만, 바이크셀 강까지 진격해 있던 소련군은 향군을 돕지 않았고 스탈린은 서방 연합군의 지원도 거부했다. 향군을 약화시키고 대신 공산주의자들을 강화하려 했기 때문이다. 15~18만의 바르샤바인이 전투에서 그리고 독일군의 보복 조치로 희생당했다.

공동 교과서는 ‘강제 노동’이라는 내용에서 독일의 잔인한 전쟁 범죄까지 폭로한다.

그들(강제 노동자)은 대부분 민간인과 전쟁 포로였다. 하지만 집단 수용소 수감자들도 제국에서의 노동 투입을 위해 끌려왔다. 그들은 다수가 농업과 군수산업에 투입되었다.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약 1,350만 강제 노동자가 독일 제국에서 노동했다. 그 밖에도 제국 경계 밖 점령 지역에서 수백만의 남녀가 강제 노동을 했다. 강제 노동이 없었다면 정권이 전쟁을 계속 수행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만 거대한 군수물자 생산을 유지하고 주민들에게 식품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었다. 강제 노동은 나치 인종학에서 ‘살 가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 사람들을 절멸시키는 또다른 범죄수단이었다.

1989년의 역사적 전환은 독일-폴란드 관계와 독일-폴란드 교과서협의회 활동 전반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헬무트 콜(Helmut Kohl)이 이끄는 통일 독일 정부가 오데르-나이세 국경을 국제법적으로 최종적으로 인정하는 국경조약을 승인함으로써 독일-폴란드 관계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이 해소되었다.

과거 정책과 관련하여 남은 중요한 문제는 폴란드인 강제 수용소 수감자 및 강제 노동자에 대한 보상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기억, 책임, 미래라는 이름의 재단을 세워 독일이 폴란드 희생자에게 총 100억 마르크를 보상하기로 합의했다. 재단의 과제는 특히 민족 간 화해와 청소년 교류 프로젝트를 장려하고, 나치범죄 희생자의 상속자와 남은 가족들의 이해관계를 보살피는 것이다.

## 맺음말

독일-폴란드 교과서 협력은 오늘날 쌍무적인 교과서 개선을 통한 국가 간 상호 이해 증진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인정받는다. 그 이유는 특히 다음 세 가지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우선 독일-폴란드 교과서 협력으로 장기간의 식민지 지배, 두 차례 전쟁에서의 막대한 피해, 영토 갈등 등으로 상호 적대적인 두 민족이 체제와 이데올로기, 군사동맹, 경제력의 차이를 넘어 역사적 화해에 성공한 것이다. 다음으로 독일-폴란드 교과서협의회는 해마다 양국을 오가며 학술회의를 개최하여 양국 역사가와 지리학자의 진지한 학문적 대화와 신뢰 구축에 크게 기여했다. 마지막으로 많은 학문적 성과를 창출하였고, ‘권고안 완성 → 권고안에서 미진하게 다룬 문제에 대한 학술 연구 → 공동 교사안내서 제작 → 공동 교과서 제작’에 이르는 교과서 협력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개척했다.

우리는 전후 폴란드와의 역사 화해를 위한 독일의 노력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독일은 패전국으로서 남한보다 더 큰 영토를 상실했지만, 1970년 바르샤바 조약에서 그리고 1990년 헬무트 콜 정부에서 국경조약을 통해 깨끗하게 포기하였다. 강제 노동을 포함한 전쟁 범죄에 대한 사죄와 보상에도 진

지하게 노력했다. 또한 교과서에 나치독일이 자행한 잔인한 전쟁 범죄를 분명하고 상세하게 기술하고, 게오르크 에커트 국제교과서연구소가 쌍무적 및 다자적 역사교과서 대화를 통한 교과서 개선 사업에 앞장섰다. 최근에 한일 간 역사 갈등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정부와 시민 사회 간에 첨예한 갈등이 전개되고 있다. 우리가 동북아에서 장기적으로 역사 화해와 지역 평화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독일의 역사적 경험은 분명한 교훈을 말해주고 있지 않은가?

※ 이 글은 집필자가 연구하여 작성한 것으로, 동북아역사재단의 공식 입장과 무관합니다.

#### | 한운석 |

튀빙겐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펠로우. 연구의 중점은 독일과 한국의 분단과 냉전, 통일문제, 역사갈등과 화해, 과거청산과 역사교육, 한독관계사, 특히 한독 에큐메니칼 협력이다. 주요 저서로는 『독일의 역사화해와 역사교육』(신서원, 2008), 『가해와 피해의 구분을 넘어: 독일-폴란드 역사 화해의 길』(공저, 동북아역사재단, 2008) 등이 있다. 번역서로는 팔크 핑엘 저, 『교과서 연구와 수정에 관한 유네스코 안내서』(동북아역사재단, 2011) 등이 있다.

## | 참고문헌 |

- 한운석, 2003, 「역사교과서 수정을 통한 독일-폴란드간의 화해노력」, 『하나의 민족, 두 개의 과거: 20세기 독일 민족과 통일문제』, 241~315쪽
- 한운석, 2008, 「폴란드-독일 공동역사교과서」, 『독일의 역사화해와 역사교육』, 신서원, 379~398쪽
- 한운석, 2008, 「폴란드-독일 공동역사교과서: 역사화해를 향한 또 하나의 도전」, 『유럽과 동아시아의 공동 교과서 편찬과 전망』, 동북아역사재단
- 한운석 외, 2008, 『가해와 피해의 구분을 넘어: 독일·폴란드 역사 화해의 길』, 동북아역사재단
- 부오지미에르즈/클라우스 찌머 (편), 최호근 (역), 2002, 『제2차 세계대전과 독일-폴란드의 과거청산. 독일-폴란드 관계 1939-1945-1949』
- 볼프강 야콥마이어 (편), 나종석/한운석 (역), 2002, 『역사분야 독일-폴란드 교과서회의의 교육학적 성과 1972-1987』
- Steuerungsrat und Expertenrat des Projektes „Deutsch-Polnisches Geschichtsbuch“, 2010, Schulbuch Geschichte, Ein deutsch-polnisches Projekt – Empfehlungen –, Berlin / Warschau.
- Asmut Brückmann u.a., 2020, *Europa Unsere Geschichte. Band 4: 20. Jahrhundert bis zur Gegenwart.*
- Ursula A. Becher/Włodzimierz Borodziej/Robert Maier (eds.), 2001, *Deutschland und Polen im zwanzigsten Jahrhundert. Analysen – Quellen – didaktische Hinweise*, Hannover: Verlag Hahnsche Buchhandlung.
- Thomas Strobel/Robert Maier (eds.), 2008, *Das Thema Vertreibung und die deutsch-polnischen Beziehungen in Forschung, Unterricht und Politik*, Hannover: Verlag Hahnsche Buchhandlung.
- Matthias Knaeip/Manfred Mack, 2007, *Polnische Geschichte und deutsch-polnische Beziehungen*, Berlin: Cornelsen.
- Haus der Geschichte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ed., 1996, *Annäherungen – Zblizenia. Deutsche und Polen 1945-1995*, Droste Verlag Düsseldorf.

『동북아역사리포트』 지난 호는 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창간호** 보존과 철거의 갈림길: 일제 인천육군조병창 유적의 현대사
- 제2호** 시진핑 시기 험한이 고조된 원인은 무엇일까
- 제3호** 남중국해 분쟁의 역사와 현황
- 제4호** 중국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역사 공정의 변화 -신간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 속 한국과 동북아-
- 제5호** 약속 이행을 촉구받는 일본 메이지산업유산: 침략전쟁과 강제동원의 그림자
- 제6호** 중국이 주장하는 '문화원조'의 배경과 문제점
- 제7호** 미쓰비시(三菱) 사도(佐渡)광산: 완전한 역사(Full History)와 보편적 인권 의식을 공유하기 위한 현장
- 제8호** 아프가니스탄과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 제9호** '종번(宗藩)' 해석과 중국 대외관계 인식
- 제10호** 서양 고지도로 확인한 우리땅 독도와 동해 표기
- 제11호** 일본의 사도광산 등재에 따른 대응 방안
- 제12호** (영문판)미쓰비시(三菱) 사도(佐渡)광산: 완전한 역사(Full History)와 보편적 인권 의식을 공유하기 위한 현장
- 제13호** 일본 언론에 공개된 '독도 사료'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제14호** 2022년 검정통과 일본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분석
- 제15호** 경찰 자료로 보는 램지어의 '태평양 전쟁의 성격' 비판
- 제16호** 중국 학계의 발해사 연구의 동인(動因)과 쟁점
- 제17호** 중국인에게 한국전쟁은 어떻게 기억되어 왔는가
- 제18호** 1947년 미 군정장관, 독도 출장을 허가하다
- 제19호** 역사문제와 한일관계 -일본은 사죄하고 반성했는가-
- 제20호** 2022년 일본 참의원 선거와 한일관계 전망
- 제21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미결의 과제
- 제22호** 광복 77주년, 한일관계의 회고와 전망
- 제23호** 한국·중국 수교에 가려진 한국·중화민국 단교 30년
- 제24호**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을 기억하자
- 제25호** 동북공정 20년, 현황과 과제
- 제26호** 중국에서 사라지는 우리 고대사
- 제27호** 한국과 베트남 관계 30년을 되돌아본다
- 제28호** (영문판)약속 이행을 촉구받는 일본 메이지산업유산
- 제29호** 중국 장성(長城)이 한반도 서북부지역까지 들어왔다고
- 제30호** 연·진·한 장성은 요동지역에 있었을까
- 제31호** 우리 역사 속의 러시아를 생각하며
- 제32호** 중국의 방어적 민족주의와 공세적 문화 주장
- 제33호** 독일-프랑스 역사 화해의 회고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미래
- 제34호**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해석전략에서 사라진 '강제(forced)'
- 제35호** 일본제국 전쟁사에 비추어본 21세기 일본의 안보전략 평가
- 제36호** 시진핑 3기와 천하주의 그리고 동아시아의 갈등
- 제37호** '중화민족공동체' 의식의 기원과 전개 과정
- 제38호** 음식도 발효를, 생각도 발효를 -김치와 파오차이의 차이-
- 제39호** 돌궐사의 시각에서 바라본 중국 대외관계사
- 제40호** 히로시마평화기념공원과 한국인원폭희생자위령비
- 제41호** 2023년 검정 통과 일본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분석